

공생과 타자: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 이론에 관한 재고찰*

김수철**

| 국문요약 |

이 논문은 초국가 이주 시대에 타자성에 대한 접근법을 도시 공간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최근 초국가 이주 시대에 타자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특징 중의 하나는 타자의 문제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 그리고 위협과 연관 짓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생성되는 복잡한 공간화 과정들은 종종 통합 아니면 배제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귀결되어 버리는 반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논문은 초국가 이주 시대에 공생(conviviality)을 통한 타자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어떻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문화정치에 요구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최근 도시 공간 이론 중에서 폴 길로이(Paul Gilroy)의 공생(conviviality)에 대한 논의,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에 관한 논의, 그리고 리차드 세넷(Richard Sennett)의 투과 도시(porous city), 협력(cooperation)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 논의가 초국가 이주 시대에 타자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 핵심어: 공생, 타자, 초국가적 이주, 공통적인 것, 투과 도시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soochulk@gmail.com

I. 서론

도시 공간의 역사는 이방인, 즉 타자와의 마주침을 어떻게 다루고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이점뿐만 아니라 반대로 타자와 함께 나란히 공존, 대면하며 사는 것이 가져다주는 불안함과 불편함은 도시 거주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도시 계획의 주요 관심 대상 중의 하나였다. 이는 도시 공간과 도시 생활의 성격을 다루고자 하는 수많은 사회이론가들, 예컨대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등에게도 친숙한 주제였다(Jacobs 2010; Lefebvre 1991; Simmel 2005). 이들 사회이론가들에 의해서 20세기 초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나타났던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정은 근대 사회이론의 주요 범주들에 대한 핵심 주장들이 풍부하게 정초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이 논문은 도시 공간 이론에 대한 고찰로서, 특히 타자, 차이와의 대면을 통해 형성되는 타자와의 관계가 도시 공간 이론에서 개념화되고 이론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성, 차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작업은 한국을 포함하여 초국가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과는 다른 경험, 생활방식, 습관,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지닌 존재들과의 일상적인 근거리 접촉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주 사회에서 타자의 존재를 대면하고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들을 고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를 준다.

오늘날의 초국가 이주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공간들은 타자에 대한 통합과 배제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제3의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 조직 원리를 띠게 된다. 왜냐하면 초국가 이주 시대의 타자들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자신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정착하거나 상당 기간 끊임없이 그 언저리를 떠도는 타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국가 이주로 인해 생성되는 제3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차이의 협상 과정과 연관된 정치 과정들을 특징짓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과 물질적 부이다. 최병두(2009)가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초국가 이주의 시대에 도시 공간 형성과 그 안에서 타자, 차이와의 협상을 다루는 정치 과정은 정체성과 물질적 부를 둘러싼 두 가지 종류의 정치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여기서 정체성과 물질적 부를 둘러싼 두 가지의 정치는 인정의 정치 그리고 재분배의 정치이다. 오늘날의 초국가 이주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간들은 이 두 가지 정치가 복잡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와 부의 재분배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각 또한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쉽게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히려 오늘날 난민 위기나 국제 이주민에 대한 혐오, 이민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은 최악의 방식으로 봉합되고 있다.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고 있듯이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추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제적 이주 과정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부정하는 자본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에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정의에 대한 질문들은 외국인, 국제 이주민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위협, 혐오의 대상으로 소환함으로써 손쉽게 해소되거나 회피되고 있는 것이다. 정체성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의 이러한 불행한 결합은 지금까지 타자, 차이를 다루는 방식, 예를 들면 다문화주의 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이 논문은 폴 길로이(Paul Gilroy)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던 ‘공생(conviviality)’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공간 이론에서의 타자성의 문제, 차이를 다루는 방식을 검토함에 있어서 길로이의 공생 개념은 오늘날 도시 공간에서의 문화적 충돌, 갈등이나 타자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전제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공생 개념은 오늘날 타자성의 문제가 다른 무엇보다도 인종주의, 민족적 동질성에 기인하는 공동체주의에 기반

을 둔 규범, 편견, 고정적 범주화에 기인하는 경향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둘째, 이 논문은 공생 개념의 정교화와 이 개념의 적용 확장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최근의 도시 공간 이론 중에서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에 관한 논의, 그리고 리차드 세넛(Richard Sennett)의 도시 공간('투과 도시'), 협력(cooperation)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특히 이들 논의에서 나타나는 초국가 이주와 정착 과정에서의 공간의 생산과 유지에 관여되는 복잡한 공간화(spatialization)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한다. 즉, '공통적인 것의 저장고로서 메트로폴리스'(Negri and Hardt 2014)와 '투과 도시(porous city)'(Sennett 2015)에 대한 논의에서 나타나는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설정, 타자와의 마주침의 조직화의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논의에서 타자와의 마주침, 관계설정 방식이 어떻게 이론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공동체의 윤리와 정치,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주의, 정체성의 정치, 도시 부의 재분배, 차이의 공간에 대한 논의에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공생 개념이 초국가 이주 시대에 타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존의 논의에 주는 함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II. 다문화주의의 위기: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

도시 공간 이론에서 초국가 이주에 의한 제3의 사회적 공간의 형성 원리, 장소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위기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국가 이주의 시대에 기존의 타자의 존재, 차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영국의 전 총리

캐머런(David Cameron)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 선언에 의해서 최근에 더욱 가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단지 정치인들의 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실패 선고를 넘어선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세계화로 인한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주민, 타자와의 관계 문제가 글로벌 금융 자본으로 대표되는 경제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글로벌 이주민의 증가와 혼합이 일상화되어 가면서 이제 일상적인 문화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난민위기, 인종주의의 노골화, 트럼프(Donald Trump) 현상 그리고 브렉시트(Brexit) 등 최근 미국과 유럽사회의 분위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동안 국제 이주자로 상징화되어 왔던 타자, 차이에 대한 보편적 윤리이자 정책의 사회적 근간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 및 사회 담론으로서 다문화주의의 전반적 쇠퇴와 타자성과 차이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대안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의 증가는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는 토론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토론의 한 예시로 다문화주의의 문제를 보편주의/특수주의의 틀에서 재고찰하고 있는 정미라(2008)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이미 그 논리적 한계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는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미라는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에 대한 공평한 인정에 토대를 둔 다문화주의는 오히려 여성 등을 포함한 한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를 '고유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담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정미라 2008). 즉 보편성을 거부하는 문화 상대주의로 환원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다.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단순한 사실판단을 유보하면서 문화적 차이의 사회적 인정에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해 왔다. 즉 문화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하나의 가치론적 기준에 의해 문화를 재단하거나 평가하여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에는 차이에 대한 도덕적으로 정당한 대우,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

운데 어떤 보편적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이를 절대시하는 시각이 내재해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실천적, 이론적으로 상대주의와 회의주의라는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정미라 2008).¹⁾

이러한 다문화주의 내에 내재해 있는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약점을 파고드는 경우를 우리는 현재 난민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사회와 미국사회에서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극우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차이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라는 논리에 따라 타자의 문화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문화도 타자의 문화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협하는 타자는 추방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미국 대선 후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촉발되어 나타나고 있듯이 주류사회의 백인 중산층, 서민층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들은 다원성, 다문화주의와 같은 이념이나 정책(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정책) 등을 국가(주로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위로부터 부과, 강요되는 이념이나 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거부한다. 동시에, ‘애국주의’ ‘미국적 가치’ 등의 또 다른 입장이나 이념을 내세우면서 이 입장도 동등하게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²⁾

- 1)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과 보완으로서 등장한 논의가 인정의 정치이다. 인정의 정치는 차이가 존중되는 공존의 지향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최소한의 토대로서의 보편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시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규범적 요구는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고 차별의 지양이라는 윤리적 규범에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지니고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찰스 테일러(Taylor 1992)에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은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주관적 관계, 즉 타인과의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중요한 도덕적 요청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상호 인정을 모든 문화에 내재한 고유한 가치로 바라봄으로써 차이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편성의 요구를 다문화주의의 철학적 기반 속에 마련하고자 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정미라 2008, 66).
- 2) 미국의 한 유명한 록가수이자 보수 우파 인사로 알려져 있는 테드 뉴던트(Ted Nugent)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좌익세력과 사회주의자 및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정당성 인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차이, 문화를 실체화하면서 인종차별적·순혈주의적·자민족중심주의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다문화주의가 중심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써 소수자의 권리 옹호에 근거해 등장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보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담론이 현재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극우담론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다문화주의에는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별다른 대응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유럽, 미국사회의 국제적 이주민에 대한 배제, 적대의 문제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위기적 상황은 단지 그 내적 논리의 문제, 즉 다문화주의에 내재한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탈규제, 사유화(privatization), 긴축(austerity) 정책과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실업 등 수많은 (백인)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의 하락이라는 재분배의 문제, 이에 따른 소외감 및 고통, 그리고 이러한 소외감과 고통에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호소했던 극우파 정치인들의 담론 등이 다문화주의의 위기의 진짜 배경이라는 것이다(Klein 2016).³⁾ 이는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다양성은 미국의 강력한 힘이다... 이런 주장은 해로운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필자는 그런 다양성을 주장하는 좌익세력을 지지할 뜻이 전혀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네 식의 다양성을 명령으로 강요하는 것을 필자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필자는 미국의 기본적인 풍습과 전통 및 선의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을 이 나라의 법으로 강요하기 위해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정치적 공정성(political correctness)을 요구하는 불량배들은 자기네 뇌사상태의 이데올로기를 미국에 강요한다. 그들은 편협하고 파괴적이다”(Nugent 2012).

3)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 영국의 캐머런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등과 같은 정치인들에 의한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실패라는 선언은 다문화주의 개념의 오남용에 가까운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홍태영 2008). 즉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유럽에서의 다문화주의(정책)가 동화주의, 통합이 아닌 이주민,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공존과 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에서만 유효한데, 실질적으로 공화주의적 동화주의(프랑스), 다문화적 동화주의(영국), 그리고 이 둘의 혼합(미국)과 같은 이민 정책은 실제로는 타자에 대한 포용이 아니라

보면 오늘날의 다문화주의의 위기 혹은 실패는 다문화주의의 내적 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외부적 요소, 즉 경제적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문제들이 그 진정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위기, 실패의 진짜 원인을 외적 요소나 내적 요소 그 어디에서 찾건 오늘날 최소한 표면적 논리상 다문화주의에 대한 거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및 분리, 더 나아가 추방의 요구의 근거에는 이러한 유사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로 수많은 주류사회의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 및 소외감도 현재 다문화주의의 위기의 한 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마도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외 문제에 설득력 있게 다가간 극우파 정치 담론들이 과거 패권 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위치에 대한 향수어린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이민자, 여성 등 그 사회의 소수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인종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다문화주의의 위기는 내적 위기와 외적 위기의 동시적 발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오늘날의 다문화주의의 위기, 실패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는 접근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최병두(2009)가 지적하고 있듯이,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상호 분리되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둘 사이의 접합을 통해서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는 기본적으로 주류집단들의 정체성을 우선하고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종적 및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서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문화적인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사회문화적 정의(예를 들어, 관용)를 추구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인정의 정치를 실

타자의 배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홍태영 2008).

천하고자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병두 2009, 17). 즉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인정의 요구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인정의 정치는 차이, 정체성의 정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정의 정치의 무정형의 가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정의 정치의 연장선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차이나 정체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 차원에서 참여 권리, 그리고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성원권이라는 측면에서 인정의 정치의 필연적으로 재분배의 문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다문화주의만이 아니라 유럽 및 미국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난민 문제, 국제 이주의 문제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오히려 국제적 이주는 초국가 자본주의의 추동력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촉진, 전유되어 온 측면이 있으며 또한 국제 이주민에 대한 거부, 차별 및 배제에 있어서 그 사회의 성원으로서 사회적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일자리, 경제적 지위하락과 같이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제기되고 있다.⁴⁾

결국 오늘날의 다문화주의의 문제는 단지 인정의 정의를 성취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재분배의 문제와도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정의 정치의 인종 문제, 문화적 차이의 승인에 대한 도덕적 요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차이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자본의 작동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성을 얻게 된다.⁵⁾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의 접합의 필요성은 오늘날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제기되는 방식에 대한 애쉬 아민(Ash Amin)의 논의를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아민에 따르면,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외국인

4) 이러한 측면에서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오늘날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담론들은 늘 리스크로 가득 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을 이용하여 현재의 정치·경제적 문제들을 외국인, 이주민의 존재를 소환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다(Bauman 2016).

5)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의 환원불가능성을 강조한 낸시 프레이저(Fraser 1995)에 따르면, 무형의 가치들만을 강조하는 인정의 정치만으로 사회적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존재는 종종 그들의 일자리나 이들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여 주는 숫자 통계, 즉 인구(population)로 환원하여 파악되거나 또는 비서구적 가치— 예를 들면,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주류 서구의 전통과 유산을 오염시키는 위협으로 전치(displacement)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Amin 2013). 즉 정치권력과 경제적 실천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외국인이라는 특정 신체와 이들의 삶 안에 기입하는 삶정치(biopolitics)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Amin 2013, 5). 이는 기존의 무형의 가치, 즉 인종적·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와 초국적 자본과 국가에 의한 유형의 가치, 즉 경제적 재분배 문제가 삶정치를 통해서 상호 교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제3의 공간, 도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 어느 시기보다도 기존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문제와 초국가적 자본과 국가에 의한 경제적 재분배 문제가 상호 교차하는 삶정치의 공간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위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의 대중적 확산 현상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이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문제가 상호교차하는 방식, 그 조건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다문화주의의 문제들과는 구분되는 논의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절에서는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 혹은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서 새롭게 주목받아 온 개념으로 공생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Hall 2012; Nowicka and Vertovec 2014; Valluvan 2016; Wise and Velayutham 2014).

III. 공생: 도시 공간에서 타자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찾기

공생이라는 개념은 본래 함께 살기(conviviality)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차이와 타자를 대면하는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실천행위와 연관된다(Illich 1973). 문화연구와 다문화연구에서 사용되는 공생 개념에 중

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는 영국의 인종 문제, 정체성의 문화정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폴 길로이(Paul Gilroy)다(Gilroy 2004). 길로이에 따르면 공생이란 “다문화(multiculture)가 사회 생활의 일상적 모습이 되어버린 영국의 도시와 다른 탈식민주의적 도시들에서의 공동거주(cohabitation)와 상호작용의 과정들”(Gilroy 2004, xi)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길로이 자신을 비롯하여 길로이의 공생 개념을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생은 다인종·다종족 사회가 거의 자명해진 사회나 도시, 특히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차이와 타자에 대한 대면과 상호작용 과정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ilroy 2004; Wise & Velayutham 2014). 이러한 공생 개념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타자와의 대면과정의 특징은 이러한 대면과정 혹은 상호작용이 차이, 타자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인정 내지는 관용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고보다는 오히려 그 대면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점이다. 길로이(Gilroy)에 따르면, 이러한 타자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역설적으로 타자, 차이,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이나 정치 전략, 혹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이는 종종 동화주의적 시각에서의 통합, 혹은 통합주의적 다문화주의로 귀결된다— 타자의 “차이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to difference)”(Amin 2013, 3)의 에토스에 의해서 가능하다(Gilroy 2004).

이러한 길로이의 논의는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에 기반을 둔 정치 전략, 정책에 대한 해체적 접근으로 무엇보다도 초국가 이주가 일상화된 탈식민주의적 글로벌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일상생활 수준에서 벌어지는 삶의 경험, 특히 일상(대중)문화의 영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여기에서 길로이는 공생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와의 마주침의 조직화 원리와 그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타자와의 ‘평화로운 공존(living side by side)’이나 규제된 접촉(regularized contact)이 아니라 ‘타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삶(living a life with others)’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공생의 도시 공간은 단지 문화적 차이가 사라진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은(unruly)”(Gilroy 2004, xiv), 즉 고정적으로 위계화된 인종적 위치로 손쉽게 환원되지 않는 공간이다(Valluvan 2016, 4).

타자와의 공동거주와 일상적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오늘날의 다문화, 다인종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난민 문제, 노동이민, 저출산, 노령화 사회의 진행에 따른 국제결혼 이민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 시민사회 안에서 타자와의 공존과 조화를 둘러싼 정체성의 문화 정치의 작동만이 아니라 국가(간) 수준에서의 다문화주의 및 이민 정책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 현실에서 정체성과 문화의 혼종성(hybridization)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매우 복잡한 문화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Kim 2010; Venn 1999). 즉 평등한 파트너 사이의 공생과 조화라는 표면적 의미와는 어긋나게 다양한 형태의 차별, 인종주의, 위계적 편견, 지배, 심지어는 분리의 의미로 유통되는 것이 사실이다(Burgess 2012).

따라서 길로이를 비롯한 공생 개념을 주창하는 여러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공생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체성과 문화의 혼종성이 일상화된 글로벌 현실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마주침의 조직화 방식에 있어서 인정 투쟁, 인정의 정치, 그리고 고착화된 정체성 개념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것은 절대 다수에 의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동정, 관용, 온정주의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행위 실천에 바탕을 둔 대안적인 정치와 윤리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결국 공생의 문화, 공생의 에토스⁶⁾는 다문화와 다민족 사회, 국가에서 이질적이고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문화를 융합하거나, 개별적인 문화 정체성을 용인, 관용하여 공존하는 사회를 넘어서서 사회적 차이와 타자가 함께 살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지향

6) 여기서 에토스(ethos)란 ‘거처(sejour)’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런 거처에 상응하는 존재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Rancière 2008, 172).

하는 사회에 더욱 가깝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차이는 정체되고 고정된 차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성하고 창조를 유발하는 차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길로이(Gilroy 2006)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생 문화에서 인종적, 민족적(ethnic) 차이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들은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가 표현했던 단어의 뜻 그대로 ‘평범한(ordinary)’ 것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인종을 정치적 존재론과 경제적 운명과 연관시키기보다 그들을 진짜로 나누는 것은 취향, 라이프스타일, 레저, 기호(preference)와 같은 훨씬 심오한 것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공생적 상호작용은 인종적 차이를 평범하고 시시하며 심지어는 지루한 것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이러한 인종적 차이가 리얼리티 텔레비전에서 광고될 때조차도 이러한 공생적 상호작용에 존재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고유한] 미덕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미덕은 우리의 도시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문화산업을 이끄는 힘이며 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민주주의가 분리적이고 피부색에 따라 코드화된 형태로 작동하도록 하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0).

길로이에 의한 공생에 대한 개념화 과정에서 제시된 풍부한 일상적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공생 문화의 예시들과 일상생활에서의 활발한 공생적 상호작용의 미덕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개념적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길로이의 개념화 방식은 여전히 느슨하며 때로는 불만족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길로이의 논의만을 통해서 이 개념이 단순한 공존(co-existence)이나 조화(harmony) 개념과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길로이의 공생 개념에 근거한 차이의 정치가 영국의 런던과 같은 메트로폴리스라는 공간적 맥락과 대중문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떻게 기존의 문화 정치와 구분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 이민 정책과 같은 공공 정책의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커먼스(communs)를 통한 도시 공간에 대한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 오늘날 초국가 이주 시대에 형성되고 있는 도시 커먼스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들 중의 하나는 도시 사회학자인 사스키아 사센(Saskia Sassen)의 “누가 도시를 소유하는가?(Who owns the city?)”라는 질문이다.

사센의 문제제기는 제3의 공간, 즉 초국가 이주의 시대에 도시 공동체의 문제, 특히 “도시의 권리(rights to the city)”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Sassen 2015). 그에 따르면, 초국가적 이주와 초국적 자본의 시대에 전 세계 주요 글로벌 도시들은 최근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빌딩 및 토지 매입에 의해서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Sassen 2015).

또한 대규모의 초국적 자본에 의한 도시 공간에 대한 소유는 기존 도시 생활의 특징들인 도시 특유의 다양성과 밀집성을 제거하고 있다. 사센에게 있어서 이러한 도시 공간은 구조적으로 자본 축적을 위한 초국적 자본에 의해서 설사 문화공간으로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떤 공간적 규범과 윤리가 함의되어 있다. 그 공간적 규범과 윤리란 역사적으로 도시는 언제나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즉 도시는 어떠한 통제나 계획, 권력에 의해서도 완전히 지배될 수 없는 여지를 남긴다는 것이다(Sassen 2015). 이러한 도시 공간의 불완전성, 즉 자본과 권력의 지배로부터의 자율성은 수많은 도시 공간 이론과 역사에 대한 연구에서 주요 연구 주제였다(de Certeau 1984; Lefebvre 1990; Sennett 2006). 그러나 이러한 도시 공간의 불완전성, 자본과 권력의 지배로부터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7) 커먼스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며 경제를 비롯하여 의료, 도시 인프라, 법, 도시운동, 도시개발정책, 문화예술 영역 등의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존재한다(Hess 2008). 하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커먼스 논의는 무엇보다도 도시 커먼스(urban commons)에 대한 논의이다. 도시 커먼스는 공통적으로 도시 거주자들, 국가, 다른 공동의 자원들과 도시 커먼스와 관계 문제, 즉 도시에서의 공동의 자원 관리 및 통제의 문제를 다룬다(Foster and Iaione 2016, 285).

오늘날 초국가적 이주 시대에 도시 커먼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공간에서의 권력, 자본에 의한 소유와 이에 대항하는 역사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초국가적 이주 시대에 도시 공간에서의 권력과 소유 문제,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지배로부터의 자율성의 문제, 즉 커먼스의 문제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체론과 리차드 세넷의 ‘투과 도시’에 대하여 검토할 것이다.

위 두 이론을 검토하는 이유는 초국가 이주 시대에 도시 공동체, 도시 공간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두 이론이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협력(cooperation)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의 문제, 차이와의 대면의 조직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체성의 문제와 부의 재분배 문제, 인정의 정치와 재분배의 정치를 접합시키는 다양한 방식과 계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있듯이, 두 이론은 도시공동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정치권력, 자본의 구조적 문제(거시적 측면)와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상호작용, 실천 행위의 문제(미시적 측면)를 동시에 고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다문화주의 위기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법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IV. 네그리 & 하트의 공통적인 것의 저장고로서의 메트로폴리스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체론은 도시에서의 권력, 자본에 의한 도시 공간의 소유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론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 공간, 특히 메트로폴리스를 공통적인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로 규정함으로써 자본에 의한 도시 공간에 대한 소유, 그리고 그 도시 공간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적 공유자원에 대한 부당한 분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체론은 이러한 도시 커먼스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 자본의 분배 문제로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초국가 이주 시대에 정체성의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게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체론은 길로이의 공생 개념에 근거한 새로운 차이의 문화정치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즉 공생 문화정치의 물질적인 조건, 자본에 의한 소유 분배적 조건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단지 경제적 소유 관계에서 소위 상부구조, 문화,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논의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기존의 정체성의 정치, 젠더, 인종 문제를 도시 커먼스라는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길로이의 공생 개념이 대중문화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이의 문화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체론은 정체성, 젠더, 인종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치 작동의 물질적 조건에 대한 논의들을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그리와 하트는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도시 공간에서의 차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현대의 메트로폴리스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통적인 것(the common)의 방대한 저장고”로서 규정된다(Negri and Hardt 2014, 227). 이들에 따르면, 도시는 “건물, 도로, 지하철,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커뮤니케이션 케이블로 이루어진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실천, 지적 회로, 정동적 네트워크, 사회적 제도들의 살아 있는 역동체”(227)이다.

현대 메트로폴리스 공간이 담고 있는 이 공통적인 것들은 “삶정치적 생산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227)이기도 하다. 즉 도시는 공통적인 것의 원천이며 공통적인 것이 흘러들어가 모이는 저장소이다. 이러한 흔적들은 도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예술가들의 도시 내 이주와 이를 뒤따르는 도시 재생 과정, 부동산 지대에 내재해 있는 외부성(externality) — 이는 위치(location)에 대한 강조에서 나타난다 — 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정교한

지표 체계로서 금융자본에 대한 논의들은 현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공통적인 것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들로서 충분하다(Negri and Hardt 2014, 228-231). 왜냐하면 부동산 지대, 금융자본의 가치에는 천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 기술, 사회적 자본, 지식 등과 같은 정형·무정형의 도시 공동 자원의 가치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외부적 요인들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228).

또한 메트로폴리스는 이주민에 대한 자본의 모순적 입장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자본주의적 통제 전략에서는 점증하는 노동력의 이주 및 혼합에 상응하여 때로는 인종주의, 인종분리라는 통제의 무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장벽 세우기는 한 도시, 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참여의 불가능으로 이어져 공간의 빈곤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현대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삶과 정치는 “노동력의 움직임에 대한 자기통제력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르지만 동등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향상적인 상호작용”을 또한 필요로 한다는 모순적 상황을 내포한다(Negri and Hardt 2014, 220). 일례로, 네그리와 하트가 제시하고 있듯이, 디자인, 브랜드, 패션 등의 창조/문화산업에서는 요구되는 문화의 부단한 흐름과 혼합을 가능케 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평등주의적 도시 어메니티(amenities)가 자본주의적 통제 전략, 즉 공간의 폐쇄, 장벽세우기, 사회적 위계, 인종차별 등의 통제 방식으로 인해 손실되는 것이 그 대표적 예시이다(Negri and Hardt 2014, 221).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자본주의적 통제 전략의 모순은 포용과 배제 사이의 모순으로 이는 통치의 위기와 분리불가능하게 연관된다. 영국, 프랑스의 동화주의적 전략(정책) 모델의 위기가 통치의 위기로 드러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이 “공유하는 목표가 사회적 위계를 창출, 유지하며 사회적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며, 그것이 삶정치적 생산을 방해하기 때문이다”(Negri and Hardt 2014, 220).

그렇다면 네그리와 하트의 메트로폴리스는 도시 공간, 메트로폴리스에서의 타자와의 대면의 조직화와 정체성의 정치를 어떻게 이론화하고 있는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정의 정치는 기존 정체성들의 표현과 그 진정

성의 천명을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체성 표현들에 대한 상호존중과 관용이라는 다문화적 틀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상호존중과 관용에 기반을 둔 다문화적 틀은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즉 관용의 기원은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의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원칙, 즉 서구 근대사회에서 핵심적인 “자유주의적 미덕(liberal virtue)”(Knowles, 2001, 100)이었다. 그리고 관용은 여전히 유럽중심주의, 자문화중심주의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Brown 2010, 홍태영 2016, 12에서 재인용).

오늘날 유럽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차이에 대한 불개입의 원칙을 의미하는 관용은 이주민과의 접촉과 마주침, 상호작용이 일상화되는 초국가 이주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다. 즉 다원적 정체성, 다원적 소속감 등과 같은 타자, 차이의 정당한 현존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수자의 차이,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강조하는 정치는 여전히 소수자 포섭의 논리를 언제나 근대적인 주류(백인)의 근대적 프로젝트 안에서 사고하게 만든다(Valluvan 2016). 이러한 과정에서 차이의 정체성들은 “존재론적으로 진정한(authentic)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늘 분리”되어 사고되는 어떤 부적절한 인식론을 낳게 된다(Valluvan 2016, 4). 발루반(Valluvan)에 따르면,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인정의 정치는 기껏해야 협소한 다문화주의 혹은 타자에 대한 동화와 통합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로 귀결되거나 여전히 타자의 정체성을 이국적인 것(the exotic)으로 놔둔 채 얼버무리지는 인정의 정치를 낳게 된다(Valluvan 2016, 4).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의 정치는 오늘날 유럽사회와 미국의 트럼프 현상에 명시적으로 발견되듯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관용의 수위가 점차로 낮아져 비관용, 혹은 노골적인 외국인 혐오와 추방의 조치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에 기반을 둔 정치 기획들에서 연유된 타자와의 공존과 그 차이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인정의 정치학은 오히려 타자, 차이의 정체성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며 더 나아가 작은 차이를 오히려 더욱 확대, 과장시키거나 타자의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고정된 관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협소하게 정의된 사회(민족, 공동체 등)에 주요한 사회적 균열이나 위협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시 공간 삶의 경험에서 공적 공간이나 도심으로부터 사적인 공간, 즉 교외(suburb)로 탈출하여 차이와 타자를 회피하게 하는 경향을 강화시키게 된다. 이는 또한 차이와 타자의 현존이 뚜렷한 공적 공간에 대한 규제(최근 프랑스에서 나타났듯이 해변에서의 부르키니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시키게 되며 이는 점차로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동시에 소수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로 나아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관용, 혹은 타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자유주의적, 유럽중심주의적 개념의 정당한 실행 결과는 오히려 비관용 내지는 관용의 수위가 점차로 낮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과 인정의 정치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의 실패에 대한 진단은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 즉 공통적인 것의 방대한 저장고로서의 메트로폴리스를 바라보는 네그리와 하트가 보기에 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정체성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리거나 본질적인 어떤 것으로 고착화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Negri and Hardt 2014, 452). 네그리와 하트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의 고착화, 본질화 경향은 사실 사회적 폭력과 위계를 폭로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기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네그리와 하트의 평가에서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Negri and Hardt 2014).

정체성의 정치, 더 정확하게는 정체성을 오직 폭로나 그로 인한 상처에 집착하는 가운데 오로지 피해자로서만 고착화하고 종국적으로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시각과 정치 전략은 네그리와 하트가 보기에 그 내용이 아무리 반란적이라 할지라도 결국 소유물로서 전략하여 “소유 공화국의 지배구조 내”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452). 네그리와 하트

가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와 같은 인정투쟁의 주창자들이 제시했던 인정의 정치의 기획에 비판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인정투쟁은 모든 정체성 표현들의 상호존중과 관용이라는 다문화적 틀의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정치를 도덕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유의 추구를 단순히 “표현과 관용의 기획으로 환원”(452)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정치가 정체성을 고착화, 고정화하는 경향의 부작용은 민족정체성의 정치에서도 나타난다. 즉 반식민투쟁, 민족해방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신생 독립국가에서 나타나듯이 민족정체성의 정치가 몇몇 상층부 엘리트 집단에 의한 지배구조의 공고화로 귀결되거나 폐쇄적이고 협소한 민족정체성을 기반으로 기존 체제로부터의 분리, 독립,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반인륜적 폭력과 학살, 테러로 귀결되는 상황들이다. 따라서 네그리와 하트에게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있어서 인종, 계급, 젠더와 연관되어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폭력과 차별 그리고 위계 구조의 형성에 대항하는 정체성의 정치의 방향은 역설적으로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탈정체화(disidentification) 전략이다.

네그리와 하트의 탈정체화 전략은 비록 이들이 정체성의 정치의 부작용과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체제 내 포섭 가능성의 위험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정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폭력과 차별에 눈감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실제로 이들은 이러한 폭로적, 비판적 작업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또한 탈정체화 전략은 정체성의 폐지 내지는 벗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체가 바로 그 정체성의 당사자들, 소수자들이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⁸⁾ 즉 예를 들어, 인종의 폐지는 인종에 의

8)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최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저작 『자본의 17가지 모순: 이 시대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에서도 나타난다. 하비의 시각은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름 아래 좌파 학계가 자본의 모순에 대한 분석과 계급 분석을 도외시하고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것이다(Harvey 2014, 23).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하비의 논의는 네그리와 하트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공통적인 것에 대한 논의와 많은 부분 교차된다. 하비는 현대 도시에서의 커먼스(의료, 교육, 주택, 자연경관, 교통, 통신, 물, 기타 공공 하부구조 분야 등)에 대한

해 차별받아온 흑인 등 소수자들에 의해서, 여성성, 혹은 젠더의 폐지는 바로 젠더에 의해서 차별받아온 여성 소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소수자에 의한 새로운 주체성(subjectivity) 형성의 과정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단순한 폐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자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459).

이러한 맥락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탈거(emancipation)와 해방(liberation)의 차이를 구분한다. 여기서 탈거란 “정체성의 자유, 즉 진정한 당신 자신(who you really are)일 수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반해, 해방은 자기 결정과 자기 변형의 자유,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바(what you can become)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453).⁹⁾ 따라서 네그리와 하트(Negri and Hardt 2014)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체성에 고정된 정치는 주체성의 생산을 중단시킨다. 이와 달리 해방은 주체성 생산에 관여하고 그것을 장악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453-454).

이 논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네그리와 하트의 정체성의 자기 폐지 혹은 새로운 주체성의 창조와 구성에 대한 논의는 수많은 사회운동론에서

교환가치 중심의 상품화, 사유화, 화폐화, 자본화로 인한 일상적인 도시 삶의 피폐화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의 공동의 부와 자원에 대한 민주적 배분 기구의 설립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하비의 입장은 자본의 모순과 이로부터 기인하는 계급 문제에 대한 분석에 보다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티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네그리와 하트의 분석과는 그 결을 달리 하고 있다.

- 9) 탈거와 해방의 구분과 상응하여 네그리와 하트는 정체성과 특이성(singularity)의 구분을 주장한다. 여기서 특이성이란 다원성과 연결된 개념으로 그 특징은 1) 언제나 자기 외부의 다양성을 가리키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규정된다는 점, 2) 자신 내부의 다양성을 가리키며 그 특이성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내부 분할들이 바로 그 특이성을 구성한다는 점, 3) 언제나 다르게 되기의 과정, 즉 시간적 다양성에 관여한다는 점이다(Negri and Hardt 2014, 462-463). 정체성의 관점에서는 정치의 과정은 자기 폐지라는 부정적이고 역설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지만 특이성의 관점에서 정치의 과정은 새로운 무언가가 되기, 즉 변신의 계기로 나타난다. 특이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Negri and Hardt(2014, 462-464)를 참조.

폭압, 억압으로부터의 단순 해방이나 저항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종류의 주체성의 구성을 위한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타자와의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그들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타자와의 마주침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네그리와 하트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도시 정치는 기존의 동화주의적이고 통합주의적인 다문화주의에서 비롯된 관용, 그리고 인정에 기반을 둔 정체성의 정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체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넘어선 또 다른 보다 역동적인 어떤 과정, 즉 새로운 주체성의 구성, 혹은 더 나아가 사회관계의 형성 과정을 상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기존의 차별 구조, 지배체제로부터의 진정한 해방(liberation)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네그리와 하트의 시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네그리와 하트의 이론에서 도시 공간, 즉 공통적인 것의 저장고로서 메트로폴리스는 정체성의 정치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주체성의 구성과 사회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하나의 구조적 조건을 요약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V. 리처드 세넷의 ‘투과 도시(porous city)’

리처드 세넷은 도시 사회학자로서 자신만의 도시 이론을 발전시켜왔다. 비록 그가 도시 커먼스라는 개념에 직접적으로 연관시켜 그의 이론을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도시 커먼스에서 제기되는 도시에서의 권력, 소유, 부의 재분배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인정의 정치, 정체성, 차이, 타자와의 대면이라는 문제는 세넷의 도시 이론에서 언제나 핵심적인 문제였다. 특히 도시 커먼스 문제,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설정 방식에 대한 리처드 세넷의 논의는 그의 최근 저작 『투게더(Together)』에서 면밀하게 제시된다(Sennett 2013). 『투게더』는 세넷의 최근 저작으로 사회이론에서의 오랜 주제 중의 하나인 협력(cooperation)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이론적 작업이자 역사적인 사례에 대한 고찰 작업으로 도시 사회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협력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세넷의 실용주의적 접근은 그 논의의 구체성과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서 도시 거주민 간의 일상 생활에서의 협력의 노력이 어떻게 기존의 정체된 정체성(인종, 젠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넷의 도시 공간 이론은 길로이의 공생 개념과 조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넷의 협력의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 그리고 투과 도시라는 개념에 담겨져 있는 도시 공간에서의 에토스는 길로이의 공생 개념을 타자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이라는 맥락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넷에게 있어서 협력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 간의 비공식적인 관계가 심화될 때 번성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에 요구되는 신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한 학습된 기대(당연시되는 습관이나 태도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넷은 현대사회에서 협력의 지속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논의를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 관계의 취약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

비공식적 관계의 유지의 어려움과 그 지속가능성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넷은 자본주의의 산업구조 변화,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실업, 파트타임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포드주의적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공유의 시간이 감소했던 것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에 주목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곧바로 비공식적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 관계(sustained relationship)가 거래의 에토스(ethos of transaction)에 의해서 대체될 때 비공식적 관계의 가치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어떤 문화적 과정에 대해 지적한다.

이는 자본주의 재구조화에 따른 조직적 변화가 언제나 항상 곧바로 협력의 약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보다는 비공식적 관계의 가치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화적 영향력으로 세넷은 거래적 에토스가 점

차로 확대 강화될 때 나타나는 절차(procedure)나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문화나 환경에 대하여 말한다. 거래적 에토스가 심화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점차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보다는 그저 주어진 절차, 프로세스에 따를 것이 요구되거나 기대된다고 말한다. 행위 규범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 프로세스의 확대는 미시적인 행위에 대한 관리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백안시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늘날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견되는 거래적 에토스 혹은 인간관계의 공식화(formalization)는 비공식적 인간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징후적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세넷은 공식성은 권위를 선호하며 놀라움, 의외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반면에 비공식성은 유동적이며 예측하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공식적 인간관계는 주고 받음(give and take)의 요소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비공식적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은 종종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낳는다. 세넷은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협력의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형성에 관련된 행위자들이 자존감과 일정 정도의 행위자로서의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고 말한다.

세넷이 현대사회에서의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그 번성의 조건에 있어서 그 비공식적 인간관계, 즉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이로 인해 등장하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도시 공동체의 미시적이고 행위적 측면에 대한 그의 독특한 시각에도 나타난다.

세넷은 타자와의 마주침, 뒤섞임은 본래 도시 본연의 역할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유럽,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징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 그 핵심적 특징은 분리와 차단이다. 도심지와 교외지역에는 쇼핑이라는 단일 기능을 가진 쇼핑몰이 새롭게 세워지고 있고 병원, 학교, 새로운 오피스 빌딩은 마치 대학 캠퍼스처럼 외곽지역에 고립되어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빌딩들은 대부분 지하층에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운영된다. 사적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심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 건물에서부터 대도시 주변에 형성된 교외 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적 공간 건설의 궁극적 목표는 모두 빗장 동네(gated community)이다.

개방 도시(open city)나 투과 도시(porous city)에 반하는 이러한 빗장 도시, 폐쇄 도시, 분리 도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는 타자와의 마주침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세넷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를 하나의 폐쇄된 체계로 바라보는 시각이다(Sennett 2006). 세넷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에서는 균형(equilibrium)과 통합(integration)이 핵심이다. 균형에 의한 폐쇄 체계라는 사회적 시각은 케인즈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시장 운영 원리로부터 나온다. 즉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어떤 상태를 가정하는 것이다. 도시 계획이나 국민 보건 분야와 같은 국가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 피드백 순환과 내부 시장은 모두 특정 프로그램이 과잉이 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폐쇄된 시스템, 사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 실행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균형이 깨질 것에 대한 공포, 즉 한 가지 기능이나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능들이 붕괴되거나 간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Sennett 2006).

또한 사회를 하나의 폐쇄 시스템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통합이 강조된다. 한 사회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 부분에 대한 단일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상과 관념은 뭔가 돌출적인 경험들을 거부하거나 제거하려는 경향이 짙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들은 통합에 방해요소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 장소에 잘 맞지 않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된다. 세넷에 의하면 근대 도시 계획들은 수많은 규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맞지 않고 돌출되고 공격적이며 공손하지 못한 걸림돌과 무질서들을 제거하고자 해왔다.

세넷은 이러한 폐쇄 도시, 빗장 도시 그리고 균형과 통합을 절대시하는 사회적 관계 설정 방식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투과 도시(porous city)를 제안한다. 투과 도시라는 개념은 미국의 도시 학자인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개방 도시(open city)의 아이디어를 변형한 것이다. 제이콥스의 개방 도시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아이디어에 흐르고 있는 분리주의적 경향(도로, 인도, 주거지 등의 분리)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제시되었다. 제이콥스는 수많은 근대 도시 계획가들과는 달리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공적, 사적 기능들이 밀도 있게 뒤섞여 있는 거리나 광장과 같은 장소들(1960년대 뉴욕 맨해튼의 동남부 지역, 나폴리, 카이로 등)이 주는 무질서의 미덕에 주목했다. 이러한 장소들에서는 예상치 못한 타자와의 마주침이 발생하고 또한 새로운 기회와 혁신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세넷에 따르면 제이콥스는 거대 자본, 개발자들은 동질성 그리고 뭔가 결정적이고 예측가능하며 균형 잡힌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Sennett 2006).

그러나 세넷은 제이콥스의 개방 도시에서 나타나는 고밀도와 다양성으로 특징지어 지는 무질서의 미덕을 받아들이면서도 제이콥스에서 나타나는 과거 도시에 대한 맹목적 향수에 동의하지 않았다(Sennett 2006). 오히려 세넷은 균형과 통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동질화된 근대 도시나 대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 시기 글로벌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비교대상으로 삼으면서 과거의 어떤 도시를 이상적으로 그려내려 하기보다는 현대 도시 계획, 디자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동시에 더욱 중요하게는 바람직한 공동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소-만들기(place-making)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¹⁰⁾

10) 메트로폴리탄 도시 공간으로서 런던 거리와 지역 동네에서의 비공식적 장소 만들기의 실천들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로는 Hall(2012)을 참조. 수잔 홀(Suzanne Hall)은 이 연구에서 세넷의 도시 공간 이론과 길로이의 공생 논의를 접합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홀의 연구는 도시 공간에서의 비공식적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의 협력적 상호관계의 형성에 대한 세넷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길로이의 공생 개념에서 제시되었듯이 통합이나 관용과 같은 개념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식적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상호협력적이고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상호작용과 관계들에 대한 흥미로운 민속지학적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홀의 연구는 길로이의 공생 개념과 세넷의 도시 공간 이론의 접합을 통한 풍부한 경험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세넷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그리고 우리 시대에 긴급하게 필요하며 동시에 근대 도시 계획가들과 세계화 이후 글로벌 이주와 대자본에 의해서 형성된 메트로폴리탄 도시 형성에서 간과되어 왔던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장소-만들기의 기획으로서 ‘투과 도시(porous city)’를 제시한다(Sennett 2015). 투과 도시는 도시 디자인, 계획의 완전한 지배나 실현이라는 이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즉 도시는 늘 불완전하며 어떠한 단일한 이데올로기, 기획, 권력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배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하게 투과 도시는 분계선(boundary)과 구획화(zoning)에 의한 분리와 배제라는 극단적 이분법이 아니라 상이한 정체성과 차이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경계(borders)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도시 공간에 대한 구획화와 분리는 공간에 대한 결정주의적 사고에 따라 주어진 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미리 상정하지만 도시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불완전한 시스템으로서 존재해왔다(Sennett 2015). 이러한 투과 도시에서 정체성, 차이의 존재는 일상생활에서의 일과 여과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상호접촉을 통해서 규정받게 된다. 세넷(Sennett 2015)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일(work)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어떤 것을 마치고 완성하는 것이 더 주요 관심사다. 도시 생활의 복잡성은 사실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능케 한다. 시민들은 일하는 노동자로서, 스포츠 경기의 관람자로서 학교 교육 문제와 국가의료체제에 대한 예산 삭감을 걱정하는 학부모이기도 하다. 도시 정체성은 하루에도 상이한 장소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상이한 경험들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투과적(porous)이다. 많은 이들이 차이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할 때 정체성을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로 단일한 경험으로 축소시킨다. 경계는 동질적이고 폐쇄된 공동체가 안전하며(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로지 쇼핑이라는 기능 하나만을 위해서 쇼핑센터를 건립하고 도시로부터 그 안에 노동자들을 차단시키는 오피스 건물과 타워들을 건설할 때 이러한 단일화된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세넷은 이러한 투과 도시의 형성에서 필요한 독특한 에토스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에토스는 세넷이 주목했던 일상생활 차원에서의 타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활발한 협력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공간의 윤리와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즉 그 공간의 윤리와 정치 어느 특정 세력이나 행위자도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은 가운데 균형적 긴장 상태에서 공동의 사회 공간에서 공동거주의 운명을 인식하는 가운데 생성된다. 이러한 공간의 윤리와 정치는 랑시에르(Jacque Rancière)가 에토스의 정의를 통해서 말하고 있듯이 특정 장소, 거처에 상응하는 존재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¹¹⁾

이러한 공간 윤리와 정치는 세넷이 타자의 존재 그리고 타자와의 마주침의 조직화 방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세넷이 말하고 있듯이 타자의 존재는 수많은 도시 개발 계획에서 나타나듯이 접촉을 회피하거나 혹은 이를 위협으로 들지우면서 안전, 분리(segregation), 구획(zoning)에 근거하여 특정 장소의 기능과 용도를 미리 규정하는 방식에서는 언제나 축출, 배제해야 할 잉여적 주체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우리와의 차이가 제거된 동일성의 집단들로 대체될 뿐이다. 하지만 투과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윤리와 정치에서의 타자의 존재는 통합이나 합의를 통한 배제나 동일화의 대상이 아니라 활발하고 역동적인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대상이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의 의례(ritual)와 예의(civility), 혹은 에토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장소 만들기의 실천들이야말로 공간 윤리와 정치에서 핵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넷의 투과 도시에서의 타자와의 비공식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는 길로이의 공생 문화에 대한 논

11)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정치는 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고유한 주체로 인해 현실화되고 그 주체의 고유한 합리성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특정한 행위양식으로 정의된다(Rancière 2008, 235). 즉 정치는 특정한 관계 속에서 참여와 몫을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장소 만들기의 실천은 정치의 중요한 작업이 된다.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고유한 공간을 만들고 정치의 주체들의 세계 그리고 정치가 작동하는 세계를 보이게 만드는 것, 즉 “새로운 사물들과 주체들, 대상과 주체,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도록 하는(이영주 2013, 193)” 것이 정치의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의에서 강조되었던 타자, 차이와의 역동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에 대한 강조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세넷의 비공식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은 도시 공간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체성, 인종과 같은 고정된 범주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비공식적인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에토스, 즉 거주 방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안전, 분리, 구획에 근거한 도시 공간의 조직화에 적극 반대하는 세넷의 투과 도시는 초국가 이주의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제3의 공간의 조직화 원리와 이에 따른 도시 문화 정치와 도시 디자인을 사고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존의 정체성의 정치나 도식적인 인종적 위계와 배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든다.

VI.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기존의 다문화주의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소수자 문화정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길로이의 공생 개념의 타당성에 제기되는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생 개념이 일반적인 의미의 공존(coexistence)이나 다문화주의에서의 유사 개념들과 얼마나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즉 개념적 차별성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공생이 오늘날 초국가 이주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다문화적 현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이나 대면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의 문제이다. 즉, 이 개념의 현실 설명력의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개념적 차별성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생은 여전히 개념적 긴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수 주류 문화에 대한 소수자의 적응(노력)을 전제하고 있는 통합주의적(integrationist) 패러다임에서 공존 개념이나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관용 개념과의 차별성,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ethnic homogeneity)에 기반을 둔 협소한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패러다임에서의 공존 개념이나 공식적 다문화주의(offi-

cial multiculturalism)에서의 공존 개념들과의 비교에서 어떤 개념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네그리와 하트의 공통적인 것의 저장고로서의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논의와 세넛의 투과 도시에 대한 논의들은 바로 이러한 공생 개념의 차별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논의들을 제공하고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정체성의 자기 폐지, 공통적인 것에 기반을 둔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정치 기획과 세넛의 투과 도시에서의 공간적 윤리 및 정치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민족, 젠더, 인종 등 고정된 정체성에 기반을 둔 분리 경향이나 구획의 원리를 넘어서는 타자와의 마주침을 상상한다. 네그리와 하트의 논의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공유 자산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분배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화의 가능성을 제기할 때 이는 더욱 구체화된다. 또한 세넛이 도시 공간의 윤리, 에토스를 통해서 도시 일상생활에서 비공식적 관계를 통한 다양한 협력의 방식을 강조할 때 이는 구체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길로이가 공생 개념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문화정치의 핵심은 차이, 타자와의 마주침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 개념의 개념적 차별성의 문제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길로이의 설명 방식에 의해서 더욱더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길로이는 공생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엄밀한 개념적 명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메트로폴리탄 도시로서의 런던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에피소드나 특정 역사적 국면(historical juncture) — 영국의 경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 20세기 중반 이후 탈식민주의 시대 — 에서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경험에 녹아 있는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공생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Williams 1977).

하지만 이러한 느슨하게 보이는 방식의 공생 개념에 대한 이론화는 간과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차이,

타자, 문화적 갈등과 충돌, 적대의 문제는 단순히 인종과 같이 고정된 범주로 설명될 수 없다. 실제로 인종적 긴장과 대립, 그리고 인종을 벗어난 차별과 대립을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만 그 최종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초국가 이주 시대에 문화적 갈등, 적대, 차이, 타자를 인식하는 우리의 담론들은 인종이나 민족과 같이 지나치게 고정된 범주에 의해서 구성되고 지배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고정적 범주를 통한 차이, 타자의 개념화는 실제 생활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차이, 차별, 타자의 모호함들을 기존의 편리하고 고정된 범주들로 분류해 버리는 범주화의 폭력과 차별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길로이가 보기에 이러한 범주화의 폭력과 차별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지속되는 핵심적 이유이다(Gilroy 2006). 길로이의 공생 개념에 대한 이론화에서 나타나는 느슨함은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타자와의 대면과정,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모호함, 역동성, 그리고 변화무쌍함에 대한 길로이의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공생 개념의 타당성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공생 개념의 현실 설명력의 문제이다. 현재 메트로폴리스에서의 타자와의 대면과정, 상호작용은 공생인가? 아니면 인종주의에 더 가까운 것인가? 공생 개념은 오늘날 초국가 이주 시대에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의 타자와의 대면과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개념인가? 메트로폴리스에서의 타자와의 상호작용, 대면과정은 모두 공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메트로폴리스의 어떠한 조건, 특성들이 타자와의 대면을 관용, 인정, 통합이 아닌 공생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가?

세계화로 인한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의 고도화와 경계 넘기 현상은 단지 글로벌 기업이나 자본의 이동의 문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광범위한 노동력으로서 이주민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성, 경계 넘기는 한 지역 및 한 민족 국가 내에서 이러한 타자와의 관계 설정과 혼합이라는 문화 정치적 문제들을 낳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이동성의 증대로 인한 문화 정치적 문제는 이주민, 외국인, 난민과의 대면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과잉 정치화되어 자국민/외국인, 주류사회/소

수사회의 경계 짓기의 문제로 전환된다. 여기서 이주민, 외국인, 난민들은 주류사회에 대한 위협이자 잠재적 테러리스트 혹은 일자리 경쟁자로 재현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생 개념은 바로 타자와 차이에 대한 대응이 오늘날과 같이 배제와 포섭이라는 이분법적 해결방식으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와의 관계 설정 및 방식이 기존의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서 새롭게 상상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초국가 이주 시대에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제3의 공간,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새로운 문화정치 및 공간의 윤리와 정치에 대한 네그리와 하트, 세넷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공생 개념에서 제기되었던 타자와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이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도시 공간 이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제3의 메트로폴리스 도시 공간에서의 타자성의 문제에 논의들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먼저, 도시 공간 연구에 주는 함의이다. 오늘날 도시 공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지배가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된 시기에 도시 공간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네그리와 하트가 지적한 ‘공통적인 것’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가 발생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 즉 주변의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상권, 역세권처럼 그 도시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및 도시 지자체에 의한 인프라 건설의 결과 등으로 형성된 무정형의 자원 및 자산들의 가치는 모두 부동산 가격, 지대에 반영되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르페브르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시의 권리(rights to the city)’ 개념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 권리 운동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가운데 이러한 도시 권리 운동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즉, 도시의 권리에서 “권리”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Foster and Laione 2016, 283).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불분명성은 불가피하게 도시 권리, 법, 그리고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의 공통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소유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공유지 등에 대한 점유 및 사용방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소유권과 점유권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을 해소하는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법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네그리와 하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시 소유권의 정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Negri and Hardt 2014). 네그리와 하트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러한 법체계, 권리의 정치는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적 개인 간의 계약에 바탕하고 있는 법체계이다. 여기서 도시 거주민이 도시 공간에서의 공통적인 자원과 맺게 되는 관계는 소유관계로 환원되며 또한 이방인과 같은 도시 거주민들이 맺게 되는 도시 공통 자원과의 관계는 한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인 성원권으로 사고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공동 자원과 도시 거주민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기능성들은 그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이 한 개인으로서 갖게 되는 권리, 즉 재산권의 관계로 축소, 환원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환원의 위험을 고려하는 가운데 도시에의 권리 운동은 도시 공동 자원과 도시 거주민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재산권과 사용권의 대립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보다 창의적 실험과 사고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넷의 투과 도시에서의 공간 윤리와 정치에 대한 논의들의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것의 저장고로서 메트로폴리스에서의 도시 운동은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협력의 조건, 즉 도시 공간에서 어느 특정 행위자나 세력도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은 균형적 긴장 상태에서의 공동의 사회 공간에서 공동주거의 운명을 인식하는 가운데 생성되는 공간의 윤리와 정치, 다시 말해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의례(ritual)와 예의(civility)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 도시재생 및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례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공동주거의 경험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새로운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실천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는 새로운 도시 공생 문화와 문화 정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¹²⁾

둘째, 정체성의 정치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네그리와 하트, 그리고 세넷의 도시 공동체에 대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인정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의 실패,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형태의 차이의 정치로 나아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회의, 그리고 탈정체성 전략이 과연 한국사회에 적합한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다문화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주민의 문제가 서구사회만큼이나 일상화되어 있다고 아직 보기 힘든 한국사회에서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선 새로운 공생의 추구가 적절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일상생활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아직 외국인,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하더라도 온정주의적 감정에 바탕을 둔 경우가 훨씬 많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타자의 존재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통해서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사회복지 서비스에의 접근권)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식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정책 홍보나 표면적인 정책 논리와는 달리 실제에선 실현된 적이 없으며 여전히 인종주의적 차별이 여전히 노골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의 정치, 타자에 대한 인정에 바탕을 둔 정치담론과 정책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즉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체성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가 제기되는 서구사회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사회민주적 국가 복지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시스템 사이에 존재하는

12) 수잔 홀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홀(Hall 2012)은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백인 이외의 거주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런던의 한 지역의 거리를 중심으로 도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민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것(the ordinary)에 집중함으로써 다양성, 차이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연구로는 최근 서울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로 신현준 외(2016)를 들 수 있다.

차이에 주목한 지적이다.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협소하게 정의된 공동체의 통합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정도와 방식에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타자의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무관심의 에토스를 주장하는 공생의 전략보다는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에서의 인정이라도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이다.

사실 정치사회적 담론과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주목받기 시작한 지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실패 더 나아가 폐기 선언은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공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생 개념 및 이것이 제기되는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공생 개념과 함께 정체성의 정치의 한계, 혹은 정체성의 자기 폐지와 같은 주장들은 타자와의 대면과정,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통합주의적 정책과 이념들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인종주의적 타자의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계를 노정해 왔으며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대안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기된 개념들이자 이론들이다.

공생 문화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인종주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생에 대한 인식은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수단들도 인종주의의 제도적이고 상호개인적 맥락에 따라서 변화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공생은 공통의 도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제기하는 차이의 문제들의 복잡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특수성들이 미처 제기하지 않는 차이의 문제들, 즉 “제도적, 인구적, 세대적, 교육적, 법적, 정치적 공통성(commonalities)의 문제들”(Gilroy 2006, 40)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기 정체성을 위주로 타자의 문화적 습관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비록 공생은 이러한 차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차이의 문제의 복잡성을 인식하게 해주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타자의 이해관계 안에서 이러한 차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Gilroy

2006, 40).

향후 본격적인 이민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다문화주의 정책 및 이념은 자민족중심주의, 순혈주의, 이민자에 대한 도구주의적 시각 등 그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을 낳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생은 동화주의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 고정된 정체성의 범주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주민들과의 일상적인 대면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는 역동적 상호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타자, 차이의 문제를 보다 성숙하게 다루는 데 있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¹³⁾

마지막으로, 초국가 시대에 도시 공간 형성 과정에 대한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이론적 논의들이 주는 함의는 그동안 별개의 것으로 다뤄져 왔던 두 개의 연구 분야 혹은 주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유용성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도시 공간 및 특정 장소에서의 장소 만들기의 실천, 도시재생정책, 자본에 의한 공간지배와 같은 정치 문화 현상을 다루는 문화지리학적·정치지리학적 관심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 인종주의,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가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간의 지배가 심화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문화정치적 영향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 재개발이나 도시 문화 정치학적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Harvey 2014; 최병두 2009).

또한 다문화주의나 국제 이주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난민 문제 등과 같은 이슈들이 기존의 이주민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김현미 외 2010).

13) 예를 들어, 한류 산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공생 문화 혹은 공생이라는 문제의식의 적극적인 도입이 갖는 의의는 작지 않다. 해외문화 교류를 한국문화에 대한 외국인 체험 프로그램과 동일시하거나 다문화 프로그램을 한국문화 홍보,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버리는 자문화 중심주의적 경향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고정된 정체성과 문화에 관습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일상(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생성되는 타자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천착하는 공생 문화는 한류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 이민, 이주(migration) 문제는 그동안 도시 공간 연구에서 문화지리학·정치지리학적 연구와는 무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많았다. 위에서 살펴본 공동체론과 협력, 투과 도시, 공생에 대한 논의들은 이 두 가지 연구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세계화 과정의 진행 결과라는 측면에서 연구 대상, 분석지점, 이론 그리고 정책적 고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상호교차의 영역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연구 영역에서의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이론들의 생산적인 상호교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교훈들과 새로운 아젠다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초투고일 : 2017. 4. 28

논문심사일 : 2017. 5. 9

게재확정일 : 2017. 5. 29

참고문헌

- 김현미·강미연·권수현·김고연주·박성일·정승화. 2010. 『친밀한 적』. 서울: 이후.
- 신현준. 2016. “서촌, 도심에 남은 오래된 동네의 고민.” 신현준·이기용 편.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파주: 푸른숲.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 이영주. 2013. “마르쿠제와 랑시에르의 정치미학에 관한 이론적 탐색.” 『커뮤니케이션이론』 제9권 제4호.
- 정미라. 2008. “여성주의와 다문화주의.” 『철학연구』 제107집.
- 최병두. 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초국적 자본주의의 문화공간에서 인정투쟁의 공간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5권 제5호.
- 홍태영. 2008. “유럽의 시민권,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인종주의: 국민국가의 전환과 극우민족주의.” 『한국정치연구』 제20권 제2호.
- Brown, Wendy 저. 이승철 역. 2010. 『관용』. 서울: 갈무리.
- Harvey, David 저. 황성원 역. 2014. 『자본의 17가지 모순』. 파주: 동녘.
- Jacobs, Jane 저.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
- Negri, Antonio, and Michael Hardt 저. 정남영·윤영광 역. 2014. 『공통체』. 일산: 사월의 책.
- Nugent, Ted 저. 오성환 역. 2012. “[해외논단]: 좌파의 다양성 논리는 위선.” 『세계일보』(2월 28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2/08/20120208004937.html>(최종검색일: 2016/10/19).
- Rancière, Jacques 저. 주형일 역. 2008. 『미학 안의 불편함』. 일산: 인간사랑.
- Sennett, Richard 저. 김병화 역. 2013. 『투게더』. 서울: 현암사.
- Amin, Ash. 2013. “Land of Strangers.” *Identities* Vol. 20, No. 1.
- Bauman, Zygmunt. 2016. “Trump: A Quick Fix for Existential Anxiety.” <https://www.socialeurope.eu/2016/11/46978/#>(최종검색일: 2016/11/15).
- Burgess, Chris. 2012. “Maintaining Identities: Discourses of Homogeneity in a Rapidly Globalizing Japan.” <http://www.japanesestudies.org.uk/articles/Burgess.html>(최종검색일: 2016/06/08).

- de Certeau, M. 1984. S. F. Rendall trans.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ster, Sheila R., and Christian Laione.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 Policy Review* Vol. 34, No. 2.
- Fraser, Nancy. 2005. "Reframing Justice in a Globalizing World." *New Left Review* Vol. 36.
- Gilroy, Paul. 2004. *After Empire: Melancholia or Convivial Culture?* Abingdon: Routledge.
- _____. 2006. "Multiculture in Times of War: An Inaugural Lecture Given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Critical Quarterly* Vol. 48, No. 4.
- Hall, Suzanne. 2012. *City, Street and Citizen: The Measure of the Ordinary*. London: Routledge.
- Hess, Charlotte. 2008. "Mapping the New Commons." <http://dx.doi.org/10.2139/ssrn.1356835>(최종검색일: 2016/10/30).
- Illich, Ivan. 1973. *Tools for Conviviality*. New York: Harper & Row.
- Kim, Andrew Eungi. 2010. "Increasing ethnic diversity in South Korea: An introductory essay." *Korea Observer* Vol. 41, No.4.
- Klein, Naomi. 2016. "It was the Democrats' Embrace of Neoliberalism that Won It for Trump." *The Guardian* (November 9).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6/nov/09/rise-of-the-davos-class-sealed-americas-fate>(최종검색일: 2016/11/11).
- Knowles, Dudley. 2001. *Pol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UK: Blackwell Publishers.
- Nowicka, Magdalena, and Steven Vertovec. 2014. "Introduction. Comparing convivialities: Dreams and realities of living-with-differenc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17, No. 4.
- Sassen, Saskia. 2015. "Who Owns Our Cities-And Why This Urban Takeover Should Concern Us All." *The Guardian* (November 24).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nov/24/who-owns-our-cities-and-why-this-urban-takeover-should-concern-us-all>(최종검색일: 2016/10/14).
- Sennett, Richard. 2006. "The Open City." 『LSECities』. <https://lsecities.net/media/objects/articles/the-open-city/en-gb/>(최종검색일: 2016/10/25).
- _____. 2015. "The World Wants More Porous Cities-So Why Don't We Build Them?" *The Guardian* (November 27). <https://www.theguardian.com/cities/2015/nov/27/delhi-electronic-market-urbanist-dream>(최종검색일: 2016/10/23).

- Simmel, Georg 저. 김덕영 역. 2005.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서울: 새물결.
- Taylor, Charles. 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Valluvan, Sivamohan. 2016. "Conviviality and Multiculture: A Post-Integration Sociology of Multi-Ethnic Interaction." *Young* Vol. 24, No. 3.
- Venn, Couze. 1999. "On the Cunning of Imperialist Reason: A Questioning Note or Preamble for a Debate." *Theory, Culture & Society* Vol. 16, No. 1.
- Willams, R. (1977). *Marxism and Literature*. UK: Oxford University Press.
- Wise, Amanda, and Selvaraj Velayutham. 2014. "Conviviality in Everyday Multiculturalism."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17, No. 4.



Conviviality and the Others: Some Reflections on Urban Theories in the Age of Transnational Migration

Kim, Soochul

Senior Research Fellow, Hanyang Peace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

This paper is a theoretical reflection on recent critical urban theories. Recently migrants, foreigners, and refugees become a common feature in many urban metropolitan places, while they are very often represented as threat, danger or uncertainty in contemporary urban politics in many regions. In this process, public response to and governmental policies on the transnational movement and settlement of so many peoples are often simplified as either integration or exclusion. While seeking alternative approaches on contemporary transnational migration and othering processes in urban metropolitan setting, some of the recent urban theories have attempted to seek out new perspectives on cultural politic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in contemporary urban theories — such as Paul Gilroy’s notion of ‘conviviality,’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dt’s theory on ‘commonality’ and Richard Sennett’s idea of ‘porous city.’ In doing so, this paper argues that while raising a significant issue of how to deal with the others in urban theories, these theories provide alternative ideas on the emerging urban cultural politics of transnational migration.

■ **Keywords:** Conviviality, the Others, Transnational Migration, Commonality, Porous City